

第212回國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0年6月20日(火)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간사선임의건
- 2. 폐회중정례회의주·요일결정의건
- 3. 업무현황보고
 - 가. 통일부

審査된案件

- 위원인사 1
- 1. 간사선임의건 2
 - 간사(曹雄奎·文喜相)인사 2
- 2. 폐회중정례회의주·요일결정의건 3
- 3. 업무현황보고 3
 - 가. 통일부

(10시12분 개의)

○委員長 朴明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국회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 16대 국회 첫번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부한 경륜과 식견을 갖추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일·외교·통상정책과 같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은 폭넓은 국민의 의견에 기초해서 수립될 때만이 비로소 국민의 지지를 받고 그 정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국회가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가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최근에 남북회담 이후에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민족화해·통일문제,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문제,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큰 시점에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본인이나 위원님 여러분들은 큰 행운의 위원님들이 아닌가 싶고 또한 무거운 사명감을 지니게 되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노력으로 국민의 기대와 민족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위원장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 여러분 모두의 뜻을 잘 받들고 또 우리 위원회 운영을 잘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과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인사

○委員長 朴明煥 우리 위원님들 상호간에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로 인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다섯 분의 초선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포진해

계십니다. 간단한 상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른쪽 曹雄奎 위원님부터 차례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曹雄奎委員 曹雄奎 위원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金德龍委員 서울 서초구의 金德龍 위원입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金榮龜委員 金榮龜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金容甲委員 경남 밀양·창녕의 金容甲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金鍾河委員 경남 창원갑의 金鍾河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朴寬用委員 부산 출신 朴寬用입니다.

○朴槿惠委員 대구 달성의 朴槿惠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徐淸源委員 徐淸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柳興洙委員 부산 수영구의 柳興洙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韓昇洙委員 韓昇洙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文喜相委員 의정부의 文喜相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金成鎬委員 서울 강서구의 金成鎬입니다.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朴相千委員 朴相千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柳在乾委員 서울 성북갑의 柳在乾 위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李洛淵委員 전라남도 함평·영광의 李洛淵 위원입니다.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馥委員 원주 출신의 李昌馥입니다.

저야말로 초선인데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林采正委員 서울 노원구의 林采正 위원입니다.

부탁하겠습니다.

○張誠珉委員 서울 금천 지구당위원장 張誠珉입니다.

외통상임위가 남북한 7,000만 민족의 새로운 버전

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상임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宗鎬委員 金宗鎬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鄭夢準委員 울산 동구의 鄭夢準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明煥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활동을 돕고 있는 위원회 직원들을 몇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金光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金容九 심의관입니다.

다음은 許泰秀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李定垠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金大安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黃智賢 행정주사입니다.

이외에도 입법조사관 한 분이 더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석중입니다.

(직원인사)

1. 간사선임의견

(14시14분)

○委員長 朴明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되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관례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온 간사 여러분을 밝혀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나라당에서는 曹雄奎 위원을, 새천년민주당에서는 文喜相 위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코자 추천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曹雄奎·文喜相)인사

○委員長 朴明煥 그러면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이 차례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다.

먼저 曹雄奎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曹雄奎委員 부족한 사람이 統外通委의 한나라당 간사직을 맡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관계의 예상치 못했던 관계개선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이목이 통외통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과제가 우리 상임위에 놓여있는데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해가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역사에 기록될만한 기록이 남겨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상위를 운영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탁을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明煥 다음은 文喜相 간사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文喜相委員 열심히 심부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明煥 金雲龍 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도착하셨는데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金雲龍委員 金雲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明煥 수고하셨습니다.

金元雄 위원님께서도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金元雄委員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明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폐회중정례회의를 어느 주 어느 요일 며칠에 하느냐를 결정하는 건을……

○鄭夢準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明煥 鄭夢準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夢準委員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金宗鎬 총재대행님을 비롯해서 韓昇洙 위원님, 저 해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위원이 세 분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간사 두 분을 선임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 위원이라고 하면 숫자로 보면 작은 비중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대변할 수 있는, 간사라고 해도 좋고 다른 이름으로 해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선임을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죽 보니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세 분 있는 데는 우리 위원회가 유일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委員長 朴明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50조1항에 보면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분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분씩 선임을 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필요로 할 때는 세 분을 대표로 하는 위원님을 모셔서 함께 의논하면 어떻겠습니까?

국회에서 상원으로 이름난 우리 위원회에서 절대 독재가 없도록 최선의 배려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 폐회중정례회의주요일결정의건

(14시20분)

○委員長 朴明煥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폐회중정례회의주·요일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상임위원회는 폐회중 최소한 월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라고 하고 동 2항에서는 정례회의의 개최일을 위원회 의결로 정하되 1회는 미리 그 개최 주·요일을 지정하여 자동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정례회의 주·요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양당 간사로 선임된 두 분과 어제 오후에 의논을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15대 국회와 동일하게 셋째주 화요일로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계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폐회 중 정례 월례회의는 셋째주 화요일로 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현황보고

가. 통일부

(14시21분)

○委員長 朴明煥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에 걸쳐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로부터의 업무보고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감안해서 오늘과 22일 오전 양일간에 걸쳐서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짚습니다.

그러면 먼저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남북정상회담 결과

를 포함한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존경하는 朴明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朴明煥 위원님의 위원장 취임과 대북정책에 높은 경륜을 갖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16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데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6대 統外通委 첫 번째 보고사항으로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金大中 대통령 내외분과 수행원 130명, 기자단 50명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6월13일부터 15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북기간 중 남북 양 정상은 세 차례의 회담과 만찬 및 오찬 등을 통하여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특히 6월14일에는 네 시간여의 단독 정상회담을 열어 마침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양 정상간의 대화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의 최고당국자간 만남 자체만으로도 민족분단사에서 역사적 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가 남북정상이 직접 나서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천과제에 합의함으로써 우리 7,000만 민족에게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초당적인 지지와 협력 그리고 국민 모두의 성원이 뒷받침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고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화적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편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기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로 하고 새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위하여 통일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의 주요업무는 통일정책, 남북대화, 교류협력, 인도지원, 통일교육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의 인원은 387명이며 예산은 362억 원으로 정부예산 0.04%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통일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왼쪽부터 梁榮植 차관 일어서서 인사드리시지요.

두 번째 張瑄燮 경수로기획단장입니다.

李 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金炯基 통일정책실장입니다.

崔炳輔 통일교육원장입니다.

孫仁敎 남북회담사무국장입니다.

申彦祥 정보분석국장입니다.

黃河守 교류협력국장입니다.

洪良浩 인도지원국장입니다.

李寬世 공보관입니다.

朴贊奉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明煥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통일부의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統一部企劃管理室長 李浩 기획관리실장 통일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금년도 통일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이미 어제 국회 본회의시에 상세히 보고드린 바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보고 자료 10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협력……

○韓昇洙委員 韓昇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해야겠어요.

여기 1페이지에 보면 ‘분단이후 남북간 최초로 공로를 이용해서 왕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공로가 서해안을 따라서 올라간 것인지 공해상에

나갔다가 들어간 것인지 그 자료 좀 한 번 지도와 같이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統一部企劃管理室長 李浩 보고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협력, 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통일교육 및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69년3월1일 국토통일원으로 개원된 이래 1970년대까지는 주로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남북대화 및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각 부처업무를 통괄·조정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1990년대부터는 남북 교류협력, 인도지원, 대북경수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에는 정부조직개편 계획에 따라서 일부 조직을 축소하고 98년2월28일 통일부로 개편하였으며 99년5월24일부터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가 신설된 반면 남북회담사무국의 조직이 축소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도표와 같으며 본부에 2실3국23과, 통일교육원 2부5과, 남북회담사무국 2부5과, 하나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안성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 개의 과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관계장관회의 산하에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정무직 2명을……

○金容甲委員 기획관리실장이 오늘 첫 보고에 우리한테 준 유인물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들고 있는 유인물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페이지부터 틀리고 있어요.

○統一部企劃管理室長 李浩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통일정책실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및 대책수립을 해왔습니다.

4월8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따라서 4월15일부터 남북정상회담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정상회담대책 수립 및 각종 관련자료 작성 등 회담준비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분야별 남북협력방안의 강구 등 6월15일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정상회담 후속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후속조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기 위해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및 의견수렴 활동과 우방국과 협력강화 및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지원 등 국제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중장기 대북정책 방안으로 남북연합의 구성·운영 등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가고 있으며 한반도 냉전구조 종식을 위한 전략개발 차원에서 대북 포괄적 접근과 연계하여 분야별, 단계별 이행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제도화하고 對北 화해·협력정책의 취지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의 후속조치 시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2000년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배포하고 통일교육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하반기까지는 통일교육협의회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미·일 대북정책조정협의회 및 한·미, 한·일 양자협약에 참석하는 등 대북정책에 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통일정책포럼, 통일문제 국제 워크숍 개최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통일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韓昇洙委員 넘어가기 전에 ‘중장기 대북정책 방안강구’ 그래서 ‘남북연합 구성·운영 등 사실상의 통일상황 구현방안 연구·검토’ 그랬는데 그 동안에 연구한 것이 있거나 검토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統一部企劃管理室長 李浩 알겠습니다.

○金容甲委員 저도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그 문제 사실상의 통일상황,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상의 통일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統一部企劃管理室長 李浩 정치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완전 통일되기 이전이라도 과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남북이 상호 왕래하고 교류, 협력하고 평화공존을 누려 나가는 것을 함축해서 ‘사실상의 통일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容甲委員 그러면 연합단계예요, 연방단계예요?

○統一部企劃管理室長 李浩 연합과 연방은 앞으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남북이 합의해서 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容甲委員 알겠습니다.

○統一部企劃管理室長 李浩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분석국에서는 북한 정보자료 수집 업무로서 북한 라디오·TV 방송 수신 및 주요 내용을 편집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자료 및 국내외 통일 문제와 관련한 자료수집을 지원하고 조선중앙통신 및 주요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북한동향 분석 업무로는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대남관계 등 주요 동향을 분석하여 정책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주 「주간 북한동향」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 북한동향」은 91년도 1월부터 발간해 왔으며 국회와 유관기관, 언론사 등에 배포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군사, 분야별 경제역량, 사회·문화분야 실태 등 북한의 부문별 실태를 심층 분석·평가하는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문제 연구 지원 및 북한자료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진 연구자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총 83건의 응모과제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20건을 선정해서 현재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보자료의 공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단행본 4,249건, 정기간행물 576건 등 이념성이 적은 특수자료를 일반자료로 재분류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자료 열람 및 원전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국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당국 차원의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SOC 확충지원 및 법적, 제도적 보장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보장 및 청산결제 등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우리측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있

게 될 남북 당국간회담 등을 통해서 북측에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은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서해안 공단조성사업 등 민간이 추진하는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위탁가공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교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로 교류협력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남북간 인적 교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89년도에 북한방문을 허용한 이후 2000년 5월말 현재까지 총 방북인원은 1만3,249명이며 현 정부 출범이후 방북인원은 1만667명으로 총 방북인원의 8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분야 등의 남북한 상호 왕래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고 쌍방교류의 정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대회에 남북한 공동참여 등 체육교류 확대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 공동입장 하는 문제, 2001년 세계탁구대회 단일팀 구성, 2002년도 월드컵 분산개최 및 단일팀 구성, 경평축구대회 부활 등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학술공동회의, 북한지역 종교시설 복원 지원, 영화·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범적 협력사업도 발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지원국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도지원국에서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면서 보건·의료지원 및 긴급구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95년 이후 대북지원 규모는 지금까지 총 4,051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까지 금년에는 749억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당국간 대화를 통해서 추진하되 인도적 차원에서 일정 규모는 조건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북 비료지원 20만t은 6월20일 오늘 현재 28항차 수송선이 출발함으로 해서 완료단계에 들어왔습니다.

한편 민간차원의 지원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적 민간 대북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옥수수재단과 유진벨 등 7개 단체에 46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林采正委員 유진벨이 무엇입니까?

○統一部企劃管理室長 李浩 결핵사업입니다.

다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교류현황은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90년 이후 지금까지 총 8,250건이 성사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사확인 196건, 서신교환 487건, 상봉 67건, 방북 1건 등이 성사되었습니다. 남북당국 또는 적십자간 합의를 통한 이산가족 교류의 추진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으로부터 서신교환 나아가서 상봉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이산가족 교류를 제도화 정례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월15일 남북공동선언의 8·15즈음 고향방문단 교환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북측의 적십자회담 제의에 따라서 6월중에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3국을 통한 민간차원의 교류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1세대 중심의 실태조사 및 자료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11월1일부터 10일까지 있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출생지 전수조사 및 행자부 호적 전산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활용하고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를 체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입니다.

민·관의 유기적인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운영 및 거주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자 지정·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각계 종교·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초기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서 정착지원금을 인상하고 특별생계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사회적응훈련·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장기적 자립·자활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통일교육원 관련업무입니다.

먼저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교육실시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면하게는 정상회담 등 통일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방북대표단 교육, 남북교류·협력사업자, 금강산 관광 도우미 등 방북대상자에 대

한 안내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기관 교수요원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교육자료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사회통일 교육에 대한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먼저 학교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초·중등학교 교사 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통일교육 시범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대학부설 통일문제연구소 학술활동 등 대학통일문제 연구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통일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통일교육용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통일교육 표준강의 전개안을 개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통일교육 전문위원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전국에 있는 11개 북한관 등에 체험교육시설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전시실은 5월말 부로 재정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전국 11개 북한관을 청소년 체험교육장 및 지역통일교육의 거점공간화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방법을 다양화하고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이버 통일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련한 정보검색, 사이버 원격강좌 실시 등 통일교육에 관한 종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3/4분기 중에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회담사무국 업무현황입니다.

먼저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하여 정상회담 준비접촉 5회, 통신·보도 실무자 접촉 2회, 의전·경호실무자 접촉 1회 등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및 분야별 실무접촉을 통해서 지난 6월13일부터 15일 간에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남북대화 대비태세 구축을 위해서는 분야별 공동위 대표단을 재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남북대화기획단회의 등 남북회담 대책기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담 유형별 세부대책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북회담 자료 정보화도 추진하고 있는데 회담자료 기록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회담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남북대화 기초자료도 발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북회담사무국에서는 판문점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연락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남북적십자 연락관 접촉 및 실무협의를 58회 가진 바 있으며 남북전화통지문 발송 및 접수는 물론이고 남북직통전화 운용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수로기획단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수로건설 본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KEDO와 한전간에 주계약이 지난 2월3일 발효되고 본공사가 착수됨에 따라서 경수로 주기기의 설계·제작에 착수하고 있으며 부지현장 공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확충, 용수관 매설 등 인프라 구축공사를 추진중이며 조만간에 취수방과제·물양장 등 대규모 토목공사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까지에는 재원조달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요되는 자금 2,47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4월중 국채발행을 통해서 1,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속의정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초에 훈련의정서 협상을 개최하고 의정서 문안에 의견접근을 보았으며 7월초에 제4차 품질보장의정서 협상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 현장관리의 철저를 위해서 KEDO 질서유지대를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말 현재로 18명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에 대한 KEDO 행동규범 교육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金榮龜委員 기획관리실장!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국군포로문제나 납북어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국군포로나 납북어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統一部企劃管理室長 李浩 그 문제는 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국군포로문제는 법적으로는 북한하고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군포로로 북한에 남아 있는 분들을 이산가족에 포함시켜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4만 5,000여명 됩니다.

○金榮龜委員 국군포로가 4만5,000명이 되어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6·25 직후에 내려오지 않고 북한에 머물고 있는 숫자가 4만5,000여명 됩니다.

○金榮龜委員 지금 생존해 있는 포로는 몇 명쯤으로 알고 계세요? 무엇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268명으로 생존확인 되었습니다.

○金榮龜委員 그러면 이번 8·15때 이산가족 상봉

할 때 국군포로나 납북어부에 대한 가족들도 포함 이 됩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이번에는 단순히 이산가족만 북에서 추천한 100명, 우리 쪽에서 보내는 100명하고 양쪽이 교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할 때는 이산가족 차원에서 그것이 포함됩니다.

○金榮龜委員 268명이나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으로만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거기에도 포함시킨다고 그러셨지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왜냐 하면 포로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납북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포함시켜서 우선 우리 남쪽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여기에 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龜委員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문제나 납북어부문제도 나왔습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대통령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다 저쪽에다 전달했습니다.

○金容甲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납북어부나 국군포로는 이산가족 속에 포함시켰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산가족문제는 엄격히 따진다면 북한 쪽에도 이산가족이 있고 우리 쪽에도 이산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상봉해야 되는 필요한 부분이고 그 대신에 북한은 미전향수 송환문제가 하나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호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도 별도로 떼어가지고 국군포로라든지 이산가족을 서로 송환하는 그것이 들어가야 형평에 맞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金大中 대통령께서나 장관께서는 국군포로라든지 납북어부에 대한 애정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빠트린 것인지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이번에 먼저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이번 적십자회담 과정에서 우리가 2차, 3차 연결해 가면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金鍾河委員 기획실장, 아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계에서 이것은 남한으로 이탈한 것만 한 것 같은데 북한이탈주민이 항간에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중국 쪽에 간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언론보도로 보아도 우리 대사관이나 이런 데 가도 외면해 버리고 하소연 하는 것 눈물겨운 것을 많이 보았는데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라 한다면

북한을 이탈했다면 우리 나라로 왔거나 중국으로 간 이탈주민도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하는데 그 관계는 왜 하나도 없어요? 중국으로 이탈한 북한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비공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明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질의방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는 위원이 질의할 것을 전부 물은 다음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방식이 있고 답변을 계속해서 들은 다음에 질의를 계속해서 하는 일문일답방식이 있습니다.

국회법 60조2항에서는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일괄질을 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 동안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관례대로 한 세분정도 질의가 끝난 후에 장관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일문일답방식을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질의 시작하시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그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사회를 보겠습니다.

또한 국회법 60조1항 단서조항에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첫번째 질의는 15분내에 마치셔야 합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 모두가 균등한 발언시간을 갖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을 저한테 맡겨 주시면 그때그때 편리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容甲委員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明煥 예. 하십시오.

○金容甲委員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회 생각으로는 이번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정말로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 통외통 위원들마저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기껏 우리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신문이나 방송밖에 없는데 회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서 우리가 앞으로 여야 정당을 초월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자료를 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업무현황만 딱 주고 거기의 속기록이라든지……

지금 보니까 신문에 절끔절끔 공개해 가지고 우리도 무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장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 전 위원들한테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예. 만들어서 관계부처와 의논해서 올리겠습니다.

○柳興洙委員 이번 회의에 관한 회의록이라든지 대화록 같은 것이 작성되어 있지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예. 다 되어 있습니다.

○柳興洙委員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좀 내주시지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예.

○林采正委員 국가간에 또는 당국간에 회의록을 공개하는……

○統一部長官 朴在圭 아니요.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부처하고 의논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柳興洙委員 그 자료 줄 수 있지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보내 올리겠습니다.

○柳興洙委員 공개하지 말고 그냥 위원들에게 주었다가 다시 가져가도 되는데……

○統一部長官 朴在圭 그것은 남북간에 이번에 공개를 못하도록 약속한 부분은……

○柳興洙委員 정상회담의 회의록, 대화록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두 정상간에도 대화록은 있는 것이지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朴明煥 앞으로 이 문제는 장관과 의논해서 혹시 회의에서 곤란하시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위원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朴寬用 위원께서 첫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朴寬用委員 朴寬用 위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분단이후 최초의 것으로서 우리 분단사의 획을 긋는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 회담이 성공된 데에 대해서 먼저 주무장관인 朴在圭 장관에게 그 수고에 대해서 축하와 더불어서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또 이를 수행하느라고 밤낮없이 고생하신 통일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6년 전에 정부에서 일하면서 남북 정상

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 임했던 한 사람으로서 불행하게도 金日成 주석의 사망으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그 때 심정으로 돌아가서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장관에게 드리는 질의들은 이 회담을 보다 내실있고 우리가 바라는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이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화해의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 여러분들은 지난 50년동안 남북 문제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전혀 참고하거나 반영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92년도에 우리가 서명한 남북 기본합의서가 완전히 폐기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우리가 기피해 왔던 7·4 공동성명의 3대 원칙만 부각되고 기본합의서, 대통령께서 늘 주장했던 기본합의서가 폐기된 것처럼 느껴진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들,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애매한 통일방안을 모호하게 배열함으로 해서 소모적인 통일 논쟁을 재촉발시키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연합과 연방의 뜻이 비슷하다거나 같거나 하는 이런 논리는 국민들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햇볕정책을 통해서 정경분리 원칙,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교류협력을 증진시킴으로 해서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이 평화공존의 과정이 생략되고 금방 바로 통일로 직결되는 통일방안 논의로 바로 들어간 데 대해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결과를 낳게 된 배경과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장관은 이 문제를 납득할 만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 장관께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시면서 정상회담에서 金 대통령은 金正日 위원장에게 북은 무력 사용을 생각하지 말라,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 의혹은 별로 좋지 않다, 비핵화 선언, 제네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서로 협력과 관계 정상화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꼭 촉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의 대답보다는 우리 대통령께서 한 이

야기를 꼭 촉구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의 결과가 공동 선언문에는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문제가 전부 삭제되어 버리고 바로 통일 논의로 들어갈 수 있는 대화였느냐, 보고를 들으면서 더욱 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을 했다고 해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 버렸느냐, 왜 이 중간 우리가 추구했던 평화공존의 단계를 왜 전혀 언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의 이와 같은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 金正日 위원장은 어떤 대답을 했느냐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과정에 대해서는 공동선언에 빠져 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신뢰구축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축소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 하여금 너무 무리하게 작위적으로 공동선언문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통령께서는 회담 이후에 귀국해서 이제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이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동선언에는 전쟁이 없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국가안보가 대통령의 제 1차적 의무라면 이런 '전쟁이 없다'라는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단정적 표현은 썩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西海交戰이 있는 지가 어제 아래입니다. 그래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언한 배경이 무엇이나, 저는 전쟁 없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또 전쟁이 없다면 상호간에 새로운 문제의 제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어져 나와야 할 것은 군비경쟁을 종식시키는 군비통제나 군축문제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다고 단정한다면 이와 같은 군비통제나 군축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이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또 전쟁이 없다고 단정한다면 북에서는 틀림없이 미군철수를 주장할 것입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대남방송은 이미 미군철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왜 이와 같은 단정적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그 다음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우리 정부의 입장

을 보면 북이 변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아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합의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신뢰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북한이 여러 가지 약속을 헌 종이 찢처럼 내버린 사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상 조심성있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 과연 진실로 변하고 있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의 보고서에 보면 정상회담에 임하는 진지한 태도와 지도층과 주민들의 최선을 다한 환대로서 그 의지와 변화를 보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변화를 믿기에는 아주 미흡한 설명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정상회담에 응하기로 한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경험을 끌어내기 위한 전술인지 아직은 확실치 않다는 것이 전반적인 논조입니다. 북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변화나 개방정책을 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더욱 더 높습니다. 어려운 북한 경제를 위해서 수십 억의 달러를 투자해 줄 곳은 남한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견해도 매우 많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지난 50년 동안에 가장 큰 고통으로 우리를 짓눌러 왔습니다. 일회성 행사, 고향방문단, 이미 15년 전에 경험했던 고향방문단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는 이산가족 문제가 치유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의 순서는 이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생사의 확인, 서신의 교환, 상호 방문, 재결합입니다. 이런 순서가 이미 일반화된 공식 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고향방문단이라는 형식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는 91년도, 98년도 두차례에 걸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정상회담 개최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산가족들은 경험과 이산가족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양차관이 이 문제를 이야기해서 문제가 조금 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처럼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식 선언문에 나온 것을 보면, 또 여야간의 영수회담 결과를 보면 100여명 정도의 고향방문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산가족의 生死確認

문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고향방문단도 좋지만 생사의 확인, 주소의 확인, 서신왕래, 상호 방문, 재결합으로 이어지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91년, 98년 이 결의안을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오늘 이 위원회에서 1,000만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문제에 관해서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결의문을 동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무튼 고향방문단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서 이 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부터 시작되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 명확한 해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국자는 적십자사 회담은 6월15일 남북 공동선언에 나타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비전향장기수 복송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고향방문단은 100여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측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어떤 방안을 북에 설명했고 북은 왜 그것을 반대했고 왜 고향방문단으로 변질해서 공동선언문에 나타났는지 그 경위와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제2항에서 나오는 “남북연합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다”라는 대목입니다.

지상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연합과 연방이 공통점이 있다고 서로 인식을 같이 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중간단계, 신뢰구축의 단계를 저버리고 바로 넘어간 것까지도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연합과 연방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연합은 각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결합체입니다.

연방은 한 정부 안에서 두 체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974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주장하기 이전에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연방제가 콘페더레이션이라고 영문으로 표기된 그 안이 국가연합과 비슷하다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분명한 연방제로 북은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이처럼 두 연방과 연합에 공통

점이 있다고 이야기한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방적 해석을 하지 마시고 金正日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를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의 경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특히 남북협력기금 조성을 확대하려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공조체제가 원활히 잘 유지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黃源卓 외교수석의 방미 설명, 대통령의 클린턴대통령과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한국까지 굳이 오는 것에 관해서 많은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미국의 입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보는 시각은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같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시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 기회에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明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成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金成鎬委員 朴寬用 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제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55년동안 우리가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아마 일부에서 달리 해석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북 공동선언에 있어서의 자주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자주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처음 거론된 것이 아니라 72년도 7·4 南北共同聲明 때부터 거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朴正熙 정권이 북한 金日成 정권과 합의한 내용을 보면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

다' 하는 명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앞 부분에 반외세 입장과 자주적인 표현이 있는데 제 개인 해석으로는 반외세 부분은 아마 북한쪽 입장이 많이 수용된 것 같고 뒤의 자주적인 입장은 당시 朴正熙 정권의 어떤 당사자 해결원칙, 남쪽의 입장이 같이 혼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남북 정상선언에 보면 앞의 외세의 간섭이 없다는 반외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 부분,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그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북한이 주장했던 외세 배격, 그런 부분이 굉장히 후퇴하고 우리 쪽이 주장해 왔던 당사자 원칙에 상당히 근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장관께서 자주문제와 관련해서 7·4 남북공동성명과 이번 6월15일 남북 공동선언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쪽의 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서는 朴寬用 위원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생각하는 우리 정부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야를 떠나서 같이 우려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8·15 한 차례 이산가족 방문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여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金大中 대통령과 金正日 국방위원장 사이에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산가족 방문을 상시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정부가 갖고 있는지에 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언론지상을 통해서 거론되는 것을 보면 방문 숫자가 100명 내외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정부 나름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明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槿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槿惠委員 여기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와서 첫 질의를 하기 전에 통일부에 꼭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통일부에 한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업무현황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상임위원들한테 보낼 적에 굉장히 급박하게, 그러니까 오늘 이 업무현황보고만 해도 아침에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는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나 외교통상위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논의되고 하는데 이렇게 충분히 검토할 것은 하고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보낸다는 것은 저는 국회 들어와서 우리 국회가 고쳐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부에서부터 먼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어도 이삼일 전에 보내 주셔서, 이것 다 잘 해 보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다 국민을 대표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통일방안문제 나온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그 다음에 화해·협력을 거쳐서 남북연합, 그리고 통일의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金大中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연합, 그 다음에 연방, 그리고 통일의 순서로 되어 있는 金大中 대통령 개인의 주장, 그런 3단계 통일을 기초로 해서 북한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두 방안 모두 연합단계를 설정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는 하지만 통일에 대해서 북한하고 협상하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안을 대신해 가지고 대통령 개인의 주장을 가지고 협상한 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의 3단계 통일을 정부의 통일안으로 공식화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구체적인 성과는 이산가족의 상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어 나간다면 남북간 교류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산가족 1세대만 해도 126만 명이 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명을

어떻게 선정할 수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70세 이상 또 전체 이산가족의 25%를 차지하는 황해도 출신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이런 것도 읽은 적이 있는데 통일부의 확실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明煥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분까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고 또 여섯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洛淵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李洛淵委員 李洛淵입니다.

궁금했던 것 몇 가지 짚막짚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13일에 金大中 대통령께서 특별기를 타고 순안공항에 도착하셔서 트랩을 내려오시기 전에 우측을 향해서 잠시 먼 곳을 응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우측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에 어떤 생각에서 그런 동작이 나왔는지 우선 궁금했습니다. 여쭙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의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6월15일 金大中 대통령께서 서울공항에 돌아오셔서 귀국보고를 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金正日 위원장과 회담하시는 동안에 ‘절망적인 느낌을 가진 때가 몇 번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때 절망적인 느낌을 가지셨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1항 자주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께서 서로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요는 자주의 문구가 북으로 하여금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다시 펴게 하는 빌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우려를 불식하는 방법중의 하나는 이번에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金正日 위원장이 어떤 인식을 보였는지 이것을 명확히 밝혀 주신다면 우려가 상당부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문제에 대해서 金正日 위원장은 어떤 인식을 보여주었습니까?

네 번째 질의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북측의 연방제를 받아들이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고려연방제와 지금의 이것과를 좀 혼동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거니와 1국가를 전제로 한 북의 기존의 고려연방제는 적어도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수정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북측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 그것이 이번 남북공동선언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남북간의 협의건 또는 합의건 간에 그것을 보는 시각의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북의 어떤 주장 가운데 일부를 수용했다, 왜 수용했느냐만을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역으로 북이 우리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 봐도 북은 우리보다 훨씬 경직되어 있는 체제이고 체제유지의 위협성이 우리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우리의 주장이나 생각을 받아들였다 이것도 대단히 중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외시하고 이미 변하고 있는 북한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전제하고서 왜 우리만 받아들였느냐라고 따지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쭙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 때문에 교육현장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현장 뿐만 아니고 성인사회에서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혼란 자체도 불가피하고 당연하고 어쩌면 바람직한 일인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업무보고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각급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기관 교수요원 양성교육 실시 등’ 그리고 ‘각종 교육자료 개발·보급’, 이 사회통일교육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며 그 교수요원들을 양성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지, 실제로 이분들이 통일부에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방법은 있는지 이런 것을 여쭙고 싶고요. 그 여쭙는 이유는 차체에 혼란을 정리한다고 할까, 급변의 한복판에서 있는 우리 세대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나 또는 좀 덜 이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교수요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사후과정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여쭙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明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夢準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鄭夢準委員 鄭夢準 위원입니다.

朴在圭 장관께서 이번에 회담을 준비하시고 또 평양에 가서서 여러 가지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정말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도 일이 많아서 거의 밤잠을 못 주무시고 특히 거기 평양에 가 있는 동안에는 그야말로 잠을 거의 못 주무시고 아주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하여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국군포로에 관해서 우리가 인식의 혼란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하면 가능하면 장관께서 바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질의는 주한미군에 관한 질의인데 그것은 일괄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林東源 전 통일부장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신원이 확인된 미귀환 국군포로 244명이 생존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아침 일간지에 우리 朴 장관께서 인터뷰하시면서 하신 얘기를 봤는데 “국군포로에 관해서는 이번에 왜 언급이 없었느냐?” 이렇게 인터뷰에서 질문을 하니까 장관께서는 “국군포로는 법적으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측 통계상에 미귀환 국군이 4만여명이라고 하나 대부분 전쟁 당시 총각들로서 그 동안 북한에서 결혼하고 아들 손자까지 얻어 살고 있다 지금은 포로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이산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오늘의 어느 일간지를 보면 국군포로 남북자 문제에 대해서 일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식입장은 국제법상 국군포로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정부내에서부터 국군포로에 관한 개념에 관해서 혼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내에서부터 혼돈이 있으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 보니까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의 소관부처가 국방부로 되어 있고 99년1월29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간단하지요. 그 정의가 나와 있고 기본정책이 나와 있는데 국군포로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참전 중에 또는 임무수행 중에 반국가단체를 포함해서

적국에 억류중인 자라고 정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정책을 보면 국가는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정책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포로의 소재 및 현황 파악, 두 번째 포로의 송환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우리 통일부에서는 국군포로에 관한 법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소관이 통일부가 아니고 국방부라서 그런지 또 국제관계에서 전쟁 중의 포로는 다 국방부에서 하는지 또 지금과 같은 우리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통일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여간에 이런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의 보도나 어제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이런 법도 있고 또 작년에 전 통일부장관께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이산가족문제는 있지만 국군포로문제는 법적으로 없다"고 대답하셨는데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상세한 자료는 국방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25 직후에 포로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 군인들 중에 북측에 억류되어 포로로 있다가 이쪽에 내려오고 싶어서 희망하는 사람은 내려왔고 또 남쪽에서도 북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만 돌려보내고 남쪽에 남겠다는 사람은 다 남겼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남북관계포로문제는 그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든 억류든 간에 북한에 그 당시 남은 숫자가 4만5,000여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포로로서 그 당시에 남았던 사람 중에 탈북해 와서 우리 국방부에 신고할 때까지는 몇 명 정도인지 실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 사람들 쪽 통계를 따져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40여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鄭夢準委員** 전임 장관님 말씀하신 기록은 장관께서 정확히 숫자를 아시는 게 좋겠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정확히 244명인데

조금 전에 보고 중에 국군포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장관께서 260여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숫자에 관해서도 정확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지난번 우리 위원님이 보고 받으실 때는 244명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온 사람들을 합하면 268명입니다.

○**鄭夢準委員** 확인된 숫자가 늘어난 것이군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예.

○**鄭夢準委員** 제가 지금 장관께 말씀드린 취지는 6·25 전쟁 끝나고 양측이 서로 포로를 교환했기 때문에 포로는 법적으로 없다 이런 뜻으로 하신 것 같은데 국군포로가 법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학자가 됐든 일부 언론에서는 국제법상 포로가 없다 이렇게 쓰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관의 견해가 어떤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장관께서 법률적으로 국군포로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국군포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법적으로는 국군포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鄭夢準委員** 장관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작년 1월에 제정된 국군포로대우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기본정책의 수립 이런 것을 전부 무시하시는,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시는 장관의 발언인데 장관께서는 이 법이 있는 것은 아셨어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그 법은 상세하게 들여다 보지는 않았습시다마는……

○**鄭夢準委員** 이것이 작년 1월에 제정된 법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서로 다를 경우는 이 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장관께서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일을 하시는지? 더군다나 주요 일간지에 법적으로 국군포로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법이 있는데 어떻게 없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10년 전에 제정된 것도 아니고 작년 1월에 됐는데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관련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서 일을 할 수가 있으며……

○**統一部長官 朴在圭** 몇 달 전입니다.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어 가지고 우리 NSC에서 국방부장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법적으로는 국군포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鄭夢準委員** 그러면 법도 있고 작년에 전임 장관

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석이 달라진 것입니까,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법이 있고 또 장관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니 그러면 법을 폐기하신 건가요, 해석이 달라지신 건가요? 저는 법률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이런 법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이 이야기가 대두되어 가지고 지난번 외통회의 이후에 국방부장관과 앉아서 우리가 정식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국방부장관 말씀이 법적으로는 북쪽에 우리 포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鄭夢準委員**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그것이 지난 2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鄭夢準委員** 그것이 서해교전 때입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금년 2월입니다.

○**鄭夢準委員** 그때 NSC 회의를 하신 특별한 무슨 상황이 있었어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아닙니다. 최근에 국군포로로서, 탈북한 사람 중에서 국군포로가 많이 있으니까 데리고 오는 것으로 해라 그래서 그때 다시 논의가 된 것입니다.

○**鄭夢準委員** 여기가 외무위원회이지 법사위원회는 아니지만 이런 법이 있는데 지금 박 장관 말씀은 “국방부장관이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나중에 다시 또 박장관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제가 상세하게 한번 더……

○**鄭夢準委員** 장관께서 국방부와 상의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이 법을 한번 1독을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예.

○**鄭夢準委員** 주한미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일괄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문보도에 보면 金正日 위원장이 주한미군이 비상상황의 조정자역할도 해줄 수 있다는 발언이 보도되었는데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신문보도를 보면 미국의 헬름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한반도의 긴장완화 때는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러한 발언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장관의 견해를 말

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明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容甲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容甲委員** 경남 밀양·창녕 출신 金容甲 위원입니다.

우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합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이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회담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회담이 끝난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통일이 눈앞에 오기라도 한 것처럼 들뜨고 金正日을 평화애호주의자인 것처럼 영웅화시키는 분위기는 오히려 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를 경계하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는 정상회담의 성과를 달리 보거나 부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고 모두 다 공감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공산 독재국가도 아닌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가 앞장서서 이런 분위기를 유도하는 측면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며 다양한 이견들이 수렴될 때 모든 일이 더욱 잘 추진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번 정상회담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도 그 성과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부장관은 통일업무의 주무장관으로서 일방적으로 성과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다양하게 개진되는 의견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우선 먼저 당부드립니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에 드러난 우리 정부의 저자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의 눈치를 보고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흔적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북한측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다니기에 바빴습니다.

물론 55년만에 두 정상은 처음 만난다는 의미도

중요하고 또 보안관계상 다 못 밝히는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최소한의 일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공항에 누가 나올지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통일부차관은 공개브리핑에서 金正日의 공항영접이 미리 합의된 것이라고 하고 청와대대변인은 합의가 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가원수가 방문하는 마당에 누가 영접을 나올지도 모르고 갔다는 것이 사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金正日의 환대라고 주장하지만 공항에 나왔다는 사실조차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두 정상이 차에 동승할 것이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런 예측도 하지 못한 채 金正日과 독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다 보니까 둘째날 오전의 회담을 당초 확대정상회담이라고 했다가 金正日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확대 회담으로 명칭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만찬석상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만찬사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金永南이 답사를 하는 부끄러운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정상회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의 협상력 부재와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가 이런 결과를 빚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망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인내하고 자제한다고 했던 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6월에 열렸습니다. 6월은 우리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6·25 전쟁이 있었던 달이며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6·25전쟁의 희생자가 무려 300만명이나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아무리 완곡하게 표현하더라도 6·25전쟁에 대한 북한정권의 책임을 언급했어야 합니다. 적어도 북한측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원칙의 문제를 망각한 것이

며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이래서야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우리는 그 동안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으며 그 결과로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답변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사과를 요구한다고 해서 한·일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한마디 말도 못 꺼내고 찢찢매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대통령이 해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무급 회의를 비롯해서 회담이 계속되는 한 반드시 이 문제는 거론되어야만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명하고 앞으로의 회담에서 문제를 제기할 용의가 없는지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평화회담입니까, 통일 회담입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평화회담입니다.

○金容甲委員 분명히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 전에 이번 회담의 성격을 평화회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평화회담이 아닌 통일회담이었습니다.

소위 6월15일 공동선언의 1항과 2항에서 통일문제를 거론한 것만 봐도 그럴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나라의 통일을 두 번씩이나 삼입해서 이번 회담의 성격을 분명히 통일회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었다고 봅니다. 북한의 한반도 정책에는 평화공존의 원칙이 없습니다. 一國家論을 펼치는 북한에게는 그들의 통일전략인 대남 적화전략만이 존재할 뿐 평화공존이라는 개념차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공동선언에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급하게 통일원칙이 선언에 포함된 것은 결국 북한의 전략에 말려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공동선언 2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용어개념부터 묻겠습니다.

이번 선언에 포함된 연합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1989년 국회에서 승인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포함된 남북연합입니까, 아니면 金大中 대통령이 야당 시절 발표했던 소위 3단계 통일론의 공화국연합입니까? 애매모호하게 남측의 연합제 안이라는 용어를 구사했는지 장관은 이 문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선언에 포함된 연합의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金大中 대통령은 李會昌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연합의 개념이 盧泰愚 대통령 당시 통일방안의 ‘연합’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선언에 포함된 연합은 우리의 통일단계인 화해·협력의 다음 단계인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 장관은 지금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 화해·협력의 1단계가 진행된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1단계 진행도 없이 곧장 2단계로 간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에 합의된 연합은 오히려 金大中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의 1단계인 공화국연합과 그 성격이 흡사합니다. 어떻게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개인의 통일론으로 민족의 운명이 걸린 통일문제를 합의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연합이라면 이것은 통일의 전 단계인 과도기이며 다음 단계인 민주적 총선거를 거쳐야 통일국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연방구성 자체를 통일의 시점으로 잡고 있으며 따라서 다음 단계의 통일프로그램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통일의 추진과정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연합 이후의 통일추진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선언문 3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인데 이 이산가족 문제는 사실상 남북한 공동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전향 장기수는 포함되고 우리의 국군포로나 납북어부 등은 소환문제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鄭夢準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장관이 어느 기자회견에서 ‘국군포로는 법적으로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1999년 1월에 국군포로대우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그해 4월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까지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12월에는 다른 아닌 통일부에서 국군포로 가족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방침까지 발표했습니다.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니까 협상할 때 그 중요한 국군포로나 납북어부에 대해서 빠뜨린 것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고 모르니까 그 협상하는데 국군포로를 빠뜨린 것이네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또한 이산가족 상봉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를 북한주민의 인권보장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북한은 현재 모든 국민을 52단계의 성분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하위 계급은 바로 월남자 가족입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주민들은 월남한 가족이 있어도 숨기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고 월남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상황이 다소 바뀌었다고 해도 이산가족 상봉 이후 당사자인 북한주민이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金正日과 상봉 후 인권보장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正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金正日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상에는 金正日 팬클럽이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분단 55년 동안 분명히 우리의 主敵이었던 金正日이 불과 2박3일만에 민족의 영웅, 평화애호주의자로 그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관은 金正日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십니까? 또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하나만 알았다면 이번에는 넷을 더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金正日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렸는데 이번에 파악한 네 가지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방북수행단 전원은 金正日이 북한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겨우 1년 전의 서해교전을 비롯해서 金大中 정부 이후에만도 네 차례나 있었던 무력도발도 결국 金正日의 지시 내지는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신을 비롯한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2박3일간 金正日의 연출에 모두가 속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부장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관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까지 따라가서 의전이나 수행하는 장관입니까, 아니면 것처럼 중요한 2차 정상회담에도 배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차 정상회담의 결과로 통일문제가 포함된 공동선언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측의 주무장관인 통일부장관은 그 회담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장관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주무장관이 배제된 채 합의된 공동선언의 통일방식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측에서 배석한 林東源씨 문제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林東源씨는 분명히 우리 국가정보원의 수장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쉽게 말하면 간첩 잡는 국정원의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장이라면 간첩을 잡는 책임자이며 안보의 책임자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평화분위기를 강조하지만 간첩은 평화시에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항상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햇볕정책을 펼쳐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책임자인 국정원장이 북한측과 통일문제를 협상하고 金正日을 만나서 귀엣말을 나누는 사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특보로서 북한측과의 협상파트너 역할을 계속 한다면 당연히 국정원장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明煥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정회하고 다음 답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張誠珉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誠珉委員 이번에 55년만에 민족의 숙원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협상하고 돌아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듣고 배워왔습니다. 李舜臣 장군이 일본의 왜적을 무찌르고 수없는 왜적의 침탈을 막고 돌아와도 국가에 대한 충신을 모략하고 모함해서 감옥으로 보내는 원균과 같은 사람은 당시 일본인이 아니라 우리

조선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시차는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번 6·15 합의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문 1항의 자주적 해결에 대해서 의미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남북당사자주의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주변국과의 공조를 튼튼히 하는 新自主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북한은 자주의 원칙을 전통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지 등의 의미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자주에 대한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주라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일각에서는 북한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주한미군의 주둔과 철수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보도를 신뢰할만한 것인가, 신뢰할만하다면 이를 북한의 전략수정으로 봐야 하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그간에 북한은 通美封南이라는 외교정책으로 일관해왔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通美通南으로 선회한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통미봉남이 통미통남으로 선회한 것은 아닌지 북한의 외교정책에 대한 시각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철수와 주둔문제를 놓고 미국과 남한이 주둔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북한이 철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우리 정부는 한미관계를 중시해서 주둔의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북관계를 한미관계보다 우선해서 철수를 하게 될 것인지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방안입니다.

기존의 6공화국 당시 盧泰愚 전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金泳三 前大統領 당시의 통일방안은 한민족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전임 대통령들은 기존에 이렇게 할 만한 통일철학과 통일방안을 준비해 오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대통령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통일방안을 만들어서 해왔다고 생각되는데 金大中 대통령같은 경우는 평생을 이 통일문제에 천착해 왔고 3단계 통일방안은 대통령께서 야당때부터 30년간에 걸쳐

서 통일철학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일철학으로 주장해 온 이 철학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렇게 평생 다듬어 오고 지켜왔었던 통일철학을 金大中 대통령께서 金大中 정부의 통일방안으로 활용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전임 대통령이 구체적인 통일철학과 통일방안을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비견해 가지고 현 정부에 새로운 통일방안을 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현 정부의 통일방안을 金大中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으로 봐도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공동선언문 2항에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을 취하는 방향을 통일방안으로 합의했는데 이는 우리가 북한의 연방제를 수용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우리의 연합제를 수용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선배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산가족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 이산가족과 협의적 이산가족으로 표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 남북 어부, 국군포로, 비전향 장기수문제까지 종합해서 이를 포괄적 이산가족이라고 개념을 정하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문 4항의 대북경협과 관련한 문제를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대북 경제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여러 가지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특히 산업단지 SOC 건설과 관련하여 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대외 경제협력기금이 현재 7,000억 정도, 국제협력단 기금이 약 400억 정도,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확충 예상액이 1조원으로 상당히 부족한 입장인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듣고 싶고 북한의 SOC 재건을 위해서 일본의 공적개발 원조나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관이 북한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우리 정부가 나서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생각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민간기업들의 대북경협 분야나 규모에 대해서 앞으로 제한을 둘 것인지 안 둘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특히 민간기업의 대북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산결제나 이중과세, 투자보장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북한의 합영법이나 특구법이 바뀌어서 민간 자본의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북한의 법과 제

도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또 우리들의 경제여력이 서독·동독에 비해서 훨씬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국제자본이나 국제기업인이나 남한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활동을 하는 민간기업들이 북한의 수익성을 보고 뛰어드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 그들이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서 북한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의 여러 가지 법과 제도와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북측 대표들을 설득했거나 그런 언질을 하신 적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 답방이 시기가 확정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인지, 답방이 조건적인지 무조건적인지, 남한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이번에 예우해 준 것에 이상가는 기대를 충족시켜주었을 때 답방을 하겠다는 전제조건을 갖고 있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金正日 열풍이 굉장히 남한 내에 3일만에 몰아쳤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기존의 냉전해체 과정속에서 미국이 주적을 고르바초프와 구 소련으로 하고 있을 때, 고르바초프가 냉전해체를 주장할 때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서방세계에서 냉전해체에 대한 환영과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따른 대가와 지지로 전 세계에 고르바초프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견해 볼 때 이번에 남쪽에서 기대했던 이상으로 북한에서 답례를 했었고 또 전쟁을 준비해 온 주적으로 간주했었던 북한이 사실상 파격과 충격과 기대 이상의 평화적 답례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결국면을 이런 대화국면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더 대결국면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남쪽 정부에서 북쪽에 그 기대를 걸었던 만큼의 파격과 충격과 기대 이상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핵심적인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북한 내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입지가 상당히 위축되거나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거 금창리 핵문제나 영변의 핵사찰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끌어낸 한반도의 이 평화적 순항을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북·미수교와 북·일수교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또 타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북한과의 수교를 위해 구체적 지원을 요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북한이 요했을 경우에 북·일관계나 북·미관계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북한을 主權國家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또한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한을 敵對的 국가에서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어떤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는지 듣고 싶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전면 개편했을 때 남한에서 이에 상응하는 국가보안법의 전면폐기나 대체입법을 현재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金正日 국방위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55년동안 적대적 국가로서 전쟁을 준비해 온 지도자 내지는 지도자의 후계자로 선전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혼란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金正日 국방위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혼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정권에서 金正日 위원장에 대한 허위의식을 집어 넣어서 국민들에게 선전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모습이 허상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체적으로 몇 가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明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張誠珉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존경하는 林采正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조금 할 것이 있다고 해서 한 사오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林采正委員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온 질의들을 이따 답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때 함께 해주셨으면 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론적인 문제인데 여태까지 우리 쪽의 통일방안 특히 金大中 대통령의 통일방안에서 평화교류, 국가연합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 아까 몇 분 질의 중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치 지금 평화교류 전 단계의 실현없이 국가연합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전 단계가 배제되는 것이고 비약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었고,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질문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아울러서 과연 평화교류라는 것이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 연방이라든가 그런 후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단계적, 분절적인 과정으로서 그것을 거쳐야만 한다는 뜻인가? 반드시 분절적,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확인됐다……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병행적으로, 동시에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 이것은 이론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측의 해명이나 입장이 없으면 이런 논란이 자꾸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동시적이고 병행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일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과정에 매듭을 짓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국군포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 참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질문을 한 번 드려보겠는데 국군포로가 많이 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서 거기에 억류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송환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문인데 만약에 우리가 협상에서 정식으로 그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북한에서는 만의 하나 그 쪽의 논리로서 반공포로와 연결시킬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반공포로를 우리가 석방할 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북한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고 李承晚 대통령의 결단으로 석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만일 이 문제를 법적으로, 아까 장관께서 법적으로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있다고 그럴 경우 반공포로에 대해서 북한에서 어떤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고 나올 것인가, 이 가능성은 없는가?

그 반공포로의 문제를 우리 국군포로와 연결시킨다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들을 구출해내는 또는 송환해내는 데서 오는 협상전략이라든가 전망에 있어서 우리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 전제와 가능성과 협상기술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좋다고 보는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없다고 보는가?

이 문제는 물론 주관부서인 국방부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긴 하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는 여러 가지 주변의 가능성과 전후맥락을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주장했다가 나중에 손해보는 이런 전략이야말로 외교에 있어서는 가장 졸렬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럴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그런 관점에서 지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따 답변하시면서 그런 문제까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明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5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明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예.

연합과 연방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측 남북연합안에 대한 배경 및 연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 때문에 당장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외교권, 군사권을 통합할 수 없고 통합적 내정권 행사도 불가능합니다.

1989년9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국가 건설, 당시 국회 공청회 및 폭넓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고 국회에도 보고가 되었

습니다. 이제까지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유지해 왔습니다.

1994년 화해·협력단계를 남북연합의 전단계로 설정했으나 의미있는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해·협력하면서 남북연합을 병행할 수 있다는 林采正 위원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유지, 우선 평화와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연합제도와 모색’ 1999년10월26일 林東源 전 장관께서 국회 본회의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金大中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개념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남북의 현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쌍방 정부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통일과정을 관리, 통일과정을 시작하고 통일을 촉진해 가는 것입니다. 즉 분단상황의 평화적 관리이고, 두 번째는 통일지향적 협력관리의 발전이며, 세 번째는 남북 통합과정 촉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남북연합기구입니다. 남북정부가 협력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 즉 남북정상회의, 남북 각료회의, 분야별 공동위원회, 국회회의 등이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경과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북측은 80년대부터 완성형 고려연방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남북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되 1연방을 구성하고 연방정부가 외교권, 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과도기 없이 즉각 연방제를 시행하되 국보법 폐지, 미군철수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서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으며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통일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90년대 초 유사한 개념을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91년 金日成 신년사에서 이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북이 현존 2체제 2정부를 그대로 두고 연방을 구성 외교권, 군사권은 남북 양측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장기간 유지, 통일을 지향하되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방향전

환.

고려연방제와 근본적 차이입니다. 남북이 상호협력해서 평화정착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의 공통점입니다.

첫째, 단계적 점진적 통일방안. 남북연합에 접근해 있습니다. 당장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 통일의 중간단계로 설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중간단계에서 2체제 2정부 유지. 내정, 외교, 군사권 등을 남북이 각각 보유 행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북간 협의회 구성입니다. 우리는 남북연합,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고 명명하기로 하고 그러나 내정, 외교, 군사권이 없는 연방정부는 사실상 상설협의체로서 이름만 다를 뿐 남북연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朴寬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金容甲委員 연합과 연방 문제 설명 다 하신 것입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예.

○金容甲委員 본위원의 질의는 남북연합이 과거 89년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金大中 대통령이 과거 재야에 있을 때 3단계 통일연합과 똑같다고 그랬지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예.

○金容甲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89년도에 한 것은 화해와 교류협력의 단계를 거쳐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 후에 연합단계로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金大中 대통령이 밝힌 3단계 통일안에는 첫 단계가 공화국연합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연합 그것이 바로 첫 단계인데 어떻게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데, 이름은 같지만 사실상 절차와 내용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지금 급작스럽게 통일문제가 합의 사항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제 사후적으로 설명하다가 보니까 똑같다고 했는데 사실 다릅니다. 앞에 그런 동질성을 회복하는 단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회답이 평화회담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통일회담에 가까운 원칙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준비 안된 사항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 질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장관 여기에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남북연합은 金 대통령이 과거 개인적으로 주장했던 그 2단계 연합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되는데 장관도 아까 그런 뉘앙스를 갖고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이제 답변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다 하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중요한 것은 저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金大中 3단계 통일방안이 사실상 같다는 것은 6공화국 당시 姜英勳 총리, 李洪九 장관이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金大中 대통령께서도 야당총재시절 이를 확인하고 높이 평가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甲委員 그렇다면 이 정부 들어와서 바로 남북연합이 통일방안의 일부라고 했다면 2년 동안 우리 국민에게 한번도 설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 정부의 통일방안은 바로 남북연합, 1단계가 되든 2단계가 되든 이 과정을 거쳐서 통일의 길로 간다 장관, 한번 설명한 적 있습니까? 그저 대통령께서 주로 하신 것은 햇빛정책을 주장했고 평화공존을 주로 이야기했지 통일문제는 한번도 국민들에게 그 의사를 물은 적이 없습니다.

과거의 정부에 있었던 것은 전부다 그대로 계승되는 것인지 그것도 계승되려고 하면 중간에 그런 의지를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갑자기 그것도 우리 국민끼리 논의된 것도 아니고 북한에 가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지난 2년여 동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가 화해·협력에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 접점이, 두 방안의 접점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당국자회담을 통해서 연구검토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張誠珉委員 위원장님, 일괄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朴相千委員 지금 2항에 보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런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취지는 전에 고려연방제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연방정부가 갖게 되어 있었는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라는 것을 내서 외교권과 군사권을 남북 양측의 정부가 그대로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어 있다는 이런 취지이지 이

것을 가지고 완전히 합의를 해 가지고 통일방안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金容甲委員 아니지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朴相千委員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쪽은 외교권과 국방권을 연방정부가 갖게 하는 것으로 주장을 했다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 쪽의 공화국연합과 비슷한, 또 과거의 체제연합과 비슷한 취지인데 그것을 가지고 말꼬리를 자꾸 잡으면 시간만 갑니다.

○委員長 朴明煥 이렇게 하시지요. 이 문제는 지금 국가연합과 국가연방의 차이에서 해석의 여지가 많고 그리고 통일문제는 온 국민이 동의하는 안을 우리가 채택해야 될 과정도 필요하고 결과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부가 또 하루 있으니까 그날 이론을 정립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시지요.

○朴寬用委員 지금 장관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왜 저런 혼란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어사전에 보면 연방제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가 있는 것을 연방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연합은 중앙정부가 없는 것이지요. 독립된 각국이 연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과 연방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李洪九 박사 이야기도 하는데 초기단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탄생되기 전에는 중앙정부의 설립에 관한 얘기를 북한이 안 했기 때문에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후에 이것을 북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金正日 위원장이 뭐라 했기에 공통점을 발견했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쟁을 하면 끝없이 갈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공통점을 인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모레 다시 회의를 하니까 그때 다시 논쟁하기로 하고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明煥 워낙 중요한 문제이니까 내일 중으로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세요.

계속 답변하시지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두 번째로 朴寬用 위원님의

첫 질의입니다.

기본합의서가 폐기되고 7·4공동성명만 강조된 느낌, 긴장완화에 대한 조치가 없는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입니다.

양 정상은 7·4공동성명 등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당장 실천 가능한 사항부터 우선 합의해서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합의들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실천을 해 나감으로써 기존합의들이 이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전쟁재발시 공멸한다는 설명에 대해 북측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남북은 실천으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당국간 회담이 되면 군사직통전화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 朴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문제도 논의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金大中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재발시 민족의 공멸을 가져 올 것이며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쌍방 정상은 대남혁명과 흡수통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앞으로 남북간 대화가 개최되면 쌍방이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협의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상호 비방·중상중지, 파괴전복행위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호혜와 신뢰관계가 구축됨으로써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朴寬用委員 정상회담 의제를 결정할 때 7·4공동성명 가지고 밀고 당기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남북기본합의서에 관한 논의를 하자는, 우리 의제 쪽으로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저쪽에 요구를 했지 않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7·4공동성명만 결과적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는 폐기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내 주장입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이번에 우리 쪽에서도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것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추진해 가면서 그것을 지켜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寬用委員 남북기본합의서를 92년도에 체결하고 난 연후에 지금과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들이 들뜨고 이제는 평화가 정착되는구나 하고 좋아했던 내용입니다.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가 공동선언문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설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7·4공동성명만 부각되고 金大中 대통령이 선거공약 때 그렇게 주장했던 중요한 남북기본합의서는 지금 어디 갔느냐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그 정도 설명 가지고는 납득하기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 비핵화공동선언 이행과 미사일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솔직하게 金正日 위원장께 전달되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金 대통령의 촉구내용에 대해 북측의 金正日 위원장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발언내용을 공개하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金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金正日 위원장은 경청하였으며 반론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해를 갖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회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밝히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寬用委員 그것이 명확한 해답이 있었는데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까, 대답을 안 하고 듣고만 있었다는 것입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회담은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朴寬用委員 그런 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의 제시 없이 전쟁은 이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믿어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합의서 이후에도 金正日 위원장이 상봉시, 사석에서 또 만찬 때 여러 차례 이번에는 꼭 지키겠다, 자기가 사인했기 때문에 이름을 걸고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朴寬用委員 그렇게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마는

그런 설명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朴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군축문제, 군비통제문제가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전쟁이 없다는 단정적인 표현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북한은 현재 전쟁을 하게 되면 망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도발할 경우 미군이 개입하게 되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는 것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金正日이 이러한 점을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 다른 얘기에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정세와 金正日 위원장의 말을 듣고 그같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국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군축문제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선 군사 직통전화부터 설치 운영하여 신뢰조치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朴寬用委員 군비통제나 군축문제를 곧 제기할 생각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앞으로 협의하겠다는 얘기이지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예.

○朴寬用委員 아직도 간첩선은 들어오고 있고 얼마 전까지도 잠수함이 인근에 왔습니다. 너무 일방적이고 단정적으로 전쟁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오는 안보적 혼란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최근 이 삼년 전부터 경제·외교분야를 중심으로 실용주의적 태도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운용면에서 효율성과 실리를 중시, 경제관료의 해외파견 등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적응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미·일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과 국제기구에 대한 접근노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변화는 지난 6월말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과 이번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식 개혁·개방 지지, 이산가족문제 및 남북경협에 대한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朴寬用委員 그런데 제가 질의하기를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의 남한으로부터 경험을 받아내기 위한 쪽이 훨씬 강하다는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런 외신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예, 보았습니다.

○朴寬用委員 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틀렸다고 보는 것입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북한이 단순하게 평화유지라든지 남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고는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朴寬用委員 그 목적이 진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고 개방되고 개혁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려는 변화나 경험을 받아내기 위한 전술적 변화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확답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변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는 우려는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알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북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밖에 없다는 주장도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현재 경제 현대화를 위해 외부세계와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우리와의 협력이 가장 실현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북도 이러한 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상호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개방과 변화의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갈 것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이산가족문제, 고향방문단 등 일회성 행사로는 이산가족의 한을 풀기 어렵고 고향방문단보다는 생사확인, 상봉, 재결합 등의 순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배경 및 경위, 규모는 100명 정도로 하였는데 늘릴 방안, 황해도 출신만 우선권을 준다는 보도의 진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목표는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로 끝나지 않고 서신교환, 상봉, 재결합 등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실현하여 이산가족교류를 제도화, 정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와 같은 입장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북측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산가족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우선 쉬운 문제부터 실현해 나간다는 입장에 따라 8월15

일쯤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제의하였습니다.

정부는 8월15일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실현시키는 한편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하여 생사·주소확인, 상봉, 왕래 및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朴寬用委員 이해가 안 갑니다. 공동선언문에 보면 고향방문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 신문에 보도된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비전향 장기수, 이산가족을 위한 고향방문단의 틀 속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야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은 우리 당 李會昌 총재에게 ‘고향방문단은 100여명 정도로 된다’ 이렇게 이번의 이산가족문제에 관해서는 고향방문단 하나로 구체화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적십자회담에서 생사확인문제를 다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조금 더 설명이 남았으니깐 다음에 하겠습니다.

8·15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도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북한측과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산가족방문단의 규모는 6월23일 개최되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쌍방 합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며 우선 쌍방 각각 100명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능한 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朴權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해도 출신 우선권 등은 보도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문제에 대한 기준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방문단 대상자는 앞으로 개최되는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결과에 따라 선정될 것이며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徐淸源委員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장관계 묻겠는데 이산가족문제는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것 아닙니까? 문제는 대통령과 金正日 위원장이 회담할 때 8·15 때 100명 선으로 방문단을 교환하자라고는 합의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당의 이 총재와의 오찬회담에서도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번 말고도 계속 이산가족은 상봉하도록 하자는 말이 나왔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합의되었는가 가장 궁금한 것 아닙니까?

朴 장관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번에 한 번 하고 앞으로 계속 더 접수하십시오’라는 말이 대통령과 金正日 위원장간에 얘기가 나왔는가 안 나왔

는가……

○統一部長官 朴在圭 나왔습니다.

○徐淸源委員 그것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이번에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8·15에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다음 2차, 3차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번 적십자회담에서 논의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柳興洙委員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金大中 대통령께서 우리 총재와의 회담에서 만약 후속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저는 보고만 드리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柳興洙委員 신문보도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만약 한 번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특단의 조치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을 주무장관이 모르십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잘 모르겠습니다.

○柳興洙委員 한번 알아 보고 모레 할 때 대답을 해주세요.

○朴寬用委員 합의문 제3항에 보면 ‘홀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방문단은 고향방문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한정되어서 적십자회담을 할 것이냐, 생사확인·서신왕래 이런 모든 문제를 적십자회담에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앞으로 포괄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朴寬用委員 어제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공동선언에 나온 틀 안에서 적십자회담을 열겠다고 발표되었습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논의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발표는 이번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8·15에 방문단 보낼 것만 먼저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회담을 열어서 다음 단계 것을 논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질의입니다.

朴 위원님께서 남북경협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을 물으시면서 특히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張誠珉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지역의 SOC확충 등 남북경협은 호혜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능력범위를 고려하여 무리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남북협력기금 확충, 민자유치,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국제자본의 참여유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달해 나갈 계획입니다.

○朴寬用委員 기금확충은 어느 규모로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지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남북협력기금은 현행법에 따라 정부출연, 민간출연, 재정융자특별회계, 타기금, 국내금융기관 등에서의 장기차입,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으로 확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의 재정형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남북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朴寬用委員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4,900억원 남아있습니다.

○朴寬用委員 앞으로 목표는 얼마나 확충할 계획입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면 그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朴 위원님 질의입니다.

黃源卓 수석이 방미하여 설명하고 대통령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우리 나라에 오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한미 양국간에는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것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朴明煥 위원장, 曹雄奎 간사와 사회교대)

그 다음에는 金成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동선언 1항과 관련, 북한이 자주를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李洛淵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의 제1항과 주한미군문제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주한미군문제는 우리와 미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을 북측에도 전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개선에 기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金大中 대통령께서 자주는 외세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되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남북한이 주변국과 모두 좋은 관계를 맺고 협조를 받는 가운데 남북이 협력을 주도하는 것이 진정한 자주임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朴槿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은 안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李洛淵 위원님 질의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시 비행기에서 나오자 우측을 응시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여러 보도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감회가 새로웠기 때문에 우리의 산하인 평양산천을 둘러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李洛淵委員 朴 장관님은 순안공항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저는 두 번 가보았습니다.

○李洛淵委員 그 주변에 건물이 있거나 이상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까? 대통령께서 허공을 보신 것입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공항에서는 가까운 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6월15일 대통령귀국보고 내용 중 金正日 위원장과의 회담시 절망적 느낌을 몇 번 가지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때였는지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단독회담에서 비공개적으로 한 발언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남북관계개선에 유익하다고 보며 공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확실하게 다짐 받는 노력이 대단히 어려웠다고 듣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정상회담 이후 성인대상 통일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통일교육원에서 양성한 교수요원들을 어떻게 관리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는 81년부터 통일교육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각급 사회교육기관의 교수요원들을 통일교육전문가로 양성해 왔으며 이들을 각 지역사회 통일교육 요원으로 활용,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조성에 이바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들 교수요원의 재교육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시키고 아울러 각급 사회교육기관이 이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鄭夢準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金正日 위원장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실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릴 사항은 대통령께서 주한미군이 동북아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셨으며 이에 대한 金正日 위원장의 이해를 넓혀 주셨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金正日 위원장의 발언은 비공개원칙에 따라 밝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夢準委員 朴 장관 말씀, 저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으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비공개회의에 들어 간 사람이 얘기를 했으니까 신문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문에 보도된 것을 우리 위원이 질의하는데 모르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비공개석상에서 양 정상이 하신 발언이 신문에 보도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장관께서는 얘기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인데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신문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신문에 보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朴 장관이 얘기하신 것은 아닙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鄭夢準委員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신문에 날 수 있습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정상이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鄭夢準委員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상임위원회에 와서도 확인도 못해 주실 정도의 비공개회의에서 하신 말씀이면 관련하신 분들이 신중하게 하셔야지요. 요즘 보면 매일매일 소위 말씀

하시는 비공개 석상에서 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고위 관계자 이런 표현을 빌려서, 그래서 제가 보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저는 거기에 참석해서 그 내용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답변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미 헬름즈 상원위원장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6월17일 헬름즈 위원장은 미국 CNN 대담프로에서 현재의 한반도 화해무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인 것이라면 장래 미군철수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긴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부는 믿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金容甲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첫째, 정상회담시 정부가 저자세로 시종일관 끌려다닌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북측이 국가간 정상회담시 적용되는 국제 의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양 정상외 안전문제를 고려한 때문이라는 북측의 설명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의 회담부터는 북한측이 의전절차와 회담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협상하고 설득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더욱 개방하고 접촉기회가 많아질수록 이런 문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金容甲委員 그런데 그 중에 통일부차관이 ‘사전에 알았다’는 것과 청와대의 대변인이 모르고 ‘갑자기 그렇게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는 것과 어느 쪽이 맞는 것입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몰랐던 것이 맞습니다.

○金容甲委員 그러면 통일부차관은 내용도 모르면서 세계 각국의 기자단이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이미 정부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왜 통일부차관이 발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자회견 때 어느 기자가 질문하

니까 또 그런 비슷한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金容甲委員 알겠습니다.

○金成鎬委員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金容甲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때 TV를 시청했었거든요. 그때 분명히 통일부차관께서는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정부에서 ‘사전에 金正日 위원장께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統一部次官 梁榮植 통일부차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그 질문이 예상됐기 때문에 평양상황실에다가 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프레스센터에는 관계부처 차관단으로 구성된 보도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상황실에서 지침이 온 내용대로 차관은 발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容甲委員 사전에 알았다는 것은 평양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발표한 거예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그렇습니다.

○金容甲委員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의 지침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朴駿鏐 수석의 지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쪽의 지침을 받은 것입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공보수석이 발표하신 내용이 부인한 내용으로 단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그 당시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질문이 나왔을 때에도 공보수석의 평양에서의 발언과 서울에서의 준비기획단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모순이 없다는 그러한 답변을 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金容甲委員 차관! 조금 전에 장관이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는데 차관은 지금 차관이 맞다는 거예요? 장관이 지금 그 문제는 사전에 잘 몰랐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차관의 얘기는 그렇지 않다,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차관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옳고 그르다는 답변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金容甲委員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장관은 분명히 그것은 잘못됐다, 사전에 몰랐다, 죄송하다 했는데 차관은 저 위에 본부에서 지시 또는 연락한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둘 중의 하나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솔직하게 말씀해서 나오기를 저희들은 바랬습니다마는 도착할 때까지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르고 간 것이 사실입니다.

○金容甲委員 그러니까 통일부내의 장·차관까지도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이 안 되는데 남북의 정상간에 한 내용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믿으시오 전쟁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돼서 이런 항목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위원님들, 제가 이번 정상회담추진위원장으로 능력부족으로 조금 차질이 생긴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容甲委員 능력부족으로 해서 차질이 생긴 문제가 아니고 장·차관의 답변이 엇갈리잖아요.

○徐淸源委員 위원회가 소장도 아니고 말이지. 내가 분명히 물어봅시다. 차관이 평양의 기획단장한테 지시 받아서 그렇게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徐淸源委員 제가 장관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양의 기획단장이 누구예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서울의 준비기획단장은 통일부차관입니다. 그리고 평양의 상황실장으로부터 모든 상황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徐淸源委員 평양의 상황실장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남북회담사무국장이 상황실장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의 상황실장은 별도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徐淸源委員 지금 차관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평양에 있는 기획단의 단장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예, 평양상황실의……

○徐淸源委員 그러면 상황실의 실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전화 받았다는 말이지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徐淸源委員 그 문서에 있는 상황실장의 이름도 몰라요? 통일원장관이……

○統一部次官 梁榮植 孫仁教 남북회담사무국장이

공식적인 상황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徐淸源委員 그러면 孫仁教씨가 지침을 줘서 그대로 발표한 것입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의 브리핑은 브리핑하는 사람이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습니다.

○徐淸源委員 그러면 장관이 여기서 위증하는 것 아닙니까? 차관말씀은 상황실에서 지침을 받아서 한 것이고 그런데 장관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이것은 중대한 얘기에요. 사전에 알았다 몰랐다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장관은 여기서 위증하는 거예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저는 姓을 걸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몰랐습니다.

○柳興洙委員 자료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차관이 상황실에서 지침을 문서로 받았다고 했는데 그 문서를 자료요청합니다. 그 문서를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위원장,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統一部次官 梁榮植 문서공개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답변을……

○柳興洙委員 정부방침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하는 건데……

○金容甲委員 지금 의견이 서로 갈리기 때문에 그 문서를 보면 차관으로서는 면책이 되는 것이고 문서가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차관이 거짓말했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런 문제 또 어떤 경우에 보니까 평양의 군중들이 ‘金大中 金大中’ 하고 연호를 했다,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그것은 질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자들이 생중계를 다 봤기 때문에 ‘金正日 金正日’ 연호도 했지만 그후에 金大中 연호도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金容甲委員 그런데 TV 본 사람 또 평양에 간 사람 중에 金大中 연호했다는 것을 아무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평양의 준비단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질의·답변에서 그러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이미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金容甲委員 생중계에서 차관은 들었습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예.

○金容甲委員 그런데 국민들이 들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아무리 들어봐도 ‘金正日’ 이

것만 했지 혹시 ‘金大中’ 하는가 싶어 가지고 여러 번 되풀이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나 하면 북한사회에서 아무리 그래도 金大中 金大中 하고 부를 수가 없어요. 만일 불렀을 때 옆에 사람이 이상하게 볼 것 아니냐 말이에요. 나중에 사상검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이렇게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 환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차관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계획된 것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관이 판단해서 한 것 아닙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金容甲委員 그것은 차관이 들은 거예요, 누가 들은 거예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그것은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시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다 생방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사마다 다 녹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金容甲委員 그러면 알겠습니다.

○柳興洙委員 위원장!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요청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曹雄奎 방금 柳興洙 위원이 요구한 문서의 사본을 통일부는 상임위 위원 전원에게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淸源委員 위원장,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전에 金正日 위원장이 공항에 온다는 것을 정부는 알았는데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발표를 안 했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알았는데 깜짝쇼를 정부에서 벌이기 위해서 안 했다는 것하고 두 번째 북한에서 그런 시나리오를 정말 안 쫓았다는 것은 외교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해명이 되어야 됩니다.

장관이 잘못이 있어서 위증을 한 것인지 또는 차관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규명되기 전에는 위원회에서 거짓보고를 듣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해서 이 문제를 의논한 뒤에 속개하도록 합시다.

○委員長代理 曹雄奎 우선 저도 그때 뉴스를 보면서 梁차관께서 프레스센터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청와대공보수석인 朴 수석께서 평양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의 대답은 몰랐다고 하면서 통일부차관께서 그렇게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셨고 통일부차관께서 나오셔서 평양에 가 있는 우리 상황실 실장으로부터 문서에 의해서 그 내용을 접수해서 발표했다, 전화나 다른 통신수단이 아닌 문서에 의해서 그 지시를 받아 발표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사실규명을 위해서 통일부는 지금 柳興洙 위원이 요구한 문서의 사본을 빨리 가져오세요. 그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9시48분 계속개회)

○委員長 朴明煥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양측 정상회담에서 金正日 위원장이 金大中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하여 평양 순안비행장에 온다는 사실을 梁 차관께서 孫仁敎씨로 기억됩니다마는 평양 상황실장이 보낸 지침문서를 통해서 알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했었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이 문서 제출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차관이 이야기한 평양 상황실장의 지침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모레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金容甲委員 조금 전에 梁 차관이 지침을 받아서 지침대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문서로 왔다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문서가 있으면 바로 보이면 될 것이 아닙니까? 왜 문서가 있는데도……

우선 문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지금 제가 조금 전까지 파악한 것은 전화로 와서 쪽지로 전달되다 보니까 여러 부처에서 많이 와서 있었으니까 받은 것은 우리 梁 차관이 받았는데 누구에게 전달되었으며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제가 확실하게 내일부터 조사해서 모레 오전에 올 때 제가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容甲委員 이 문제가 사실상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 프레스센터를 통해서 세계에 전파가 되는데 여기에서 허위발표를 한다든지 사실을 감춘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남북회담 전체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제가 마침 질의를 해서 그렇지 질의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이것이 덮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차관의 말이 맞다면 남북정상회담을 극적으로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만일에 장관 말이 맞다면 이것은 차관이 자기가 마치 어떤 역할을 한 것 같이 과장해서 한, 그런들 중의 하나가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 하나를 보아서도 여태까지의 전체회담의 발표나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상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고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또 여기 누구인가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시간을 주시면 모레까지……

○**金容甲委員** 철저히 조사하고 할 것도 없어요. 오늘 그 문서가 있으면 그 중의 하나를 내놓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그 문서는……

○**金容甲委員** 그러면 차관은 아까 답변한 여기에 조금도 거짓말이 없지요? 분명히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발표했다는 것.

차관! 아까 답변에서 무슨 다른 점이 있습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브리핑 원고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파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평양과 서울의 현지감각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金容甲委員**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아까 틀림없이 지침을 받아서 그대로 발표를 했다고 한 것 아닙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예. 방향지침은 받습니다.

○**金容甲委員** 지침을 받는데 그래 받아서 그렇게 발표했다고 했지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예.

○**金容甲委員** 그러니까 장관은 지금 현재 다른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그것은 아니다 했고 지금 서류를 내라고 하니까 서류를 며칠 후에 조사해서 이야기한다는데 그것은 우리가 현재 믿을 수가 없습니다.

○**統一部次官 梁榮植** 장관님 말씀이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하루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는 받았습시다마는 확실하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상황실에서는 경호 호위 문제는……

○**金容甲委員** 차관이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우리 속기록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 몰랐다. 잘못했다. 사과한다.” 그리고 통일부 차관은 답변하기를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침대로 발표를 했다. 그러나 그 서류를 지금 찾지 못했다.”까지 장관이 답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관에게 “그 사실이 맞지요?” 하고 질문하는데 그 이상 더 사족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분 중의 한 분이 거짓말하거나 안 그러면 정부 전체에서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잘못 하면 회담 전체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말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明煥**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문서의 존재 여부, 진위 문제, 또 이런 상반된 보도가 공보수석이나 프레스센터 보도본부에서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소상한 조사를 모레 또 통일부장관, 차관이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에 그 진상에 대해서 장관이 정확히 하고 그 때 또 추가 질의를 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지금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떠시겠어요?

○**柳興洙委員** 이것이 지금 팩트가 명백한 사실입니다. 공항에 마중 나오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그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같은 부처에 있는 장관, 차관 두 분이 전혀 상반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梁** 차관이 문서가 있든 없든 아까 명백히 문서라고 이야기했고 이 속기록을 본다면 전후 사정을 봐서 문서가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문서로 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의 유무와 관계 없이 지침을 받아서 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일 아닙니까, 지침을 받아서 **梁** 차관이 발표를 했다 하는 부분은 문서가 있든 없든 그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침을 받아서 발표한 **梁** 차관의 내용과 장관이 성을 걸고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같은 부처의 장·차관이 상반된 발표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 중요한 정말 역사적이고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준 남북의 정상회담의 신뢰성을 굉장히 크게 훼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의 발표를 국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단순하고

아주 사실이 명백한 일을 가지고 같은 부처의 장·차관이, 그것도 남북회담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장·차관이 서로 상반된 발표를 하고 있다면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알맹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점에서는 대단히 이번 남북회담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런 거짓말하고 있는 보고를 상임위에서 받고 있다 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회도 바로 직전까지 본 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에 대해서 협조할 마음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두 장·차관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거짓말 보고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明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사안의 중대성을……

金元雄 위원 말씀하세요.

○金元雄委員 제가 오늘 처음 발언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실 더 회의를 진행시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규명되기 전에는 이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여기서 회의를 산회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그것이 규명된다고 보고를 받았을 때 내일이든 모레이든 그 때 가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明煥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이 문제는 진상히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언론이 주목하고 있고 사안이 아주 중요한 민족적인 숙원을 해결하는 길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해명이 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으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조사가 지금 이 밤중에 당장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니까 모레 통일부에서 이 문제를 먼저 진상조사 해서 진상조사 보고를 받고 바로 오늘 답변하시던 나머지 부분과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관찮으시겠습니까?

柳在乾 委員 말씀하세요.

○柳在乾委員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까마는 두 시부터 여섯 시간 앉아 있다가 아무 회의의 결말도

못 보고 돌아가려니까 섭섭합니다.

지금 장·차관의 보고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잘못 하지 않았는가, 의도적은 아니겠지만 실수라도 거짓보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 짓고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옳은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장관계서는 시종일관 전혀 모르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梁 차관계서는 평양 상황실에서 전화로인지 팩스인지, 팩스라는 이야기는 속기록에 찾아볼 수도 없고 전화로 온 내용을 누가 받아서 쪽지로 전달한 것을 보고 발표를 했는데 파기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문서로 남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확하지 않은데 정확히 그것을 우리가 규명도 못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개인의 명예에도 치명적인 엄청난, 우리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누를 범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수록 동기부여는 장·차관 두 분이 하셨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고 오늘 회의를 마친다고 하는 것이 석연치 않고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梁 차관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정확하게 한 말씀하시고 회의를 산회하더라도 확실히 우리가 알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統一部長官 朴在圭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柳在乾委員 예.

○統一部長官 朴在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우리가 공항에 타고 가면서까지도 그 때 비행기 안에서 金容淳이가 나올 것이냐 金永南이가 나올 것이냐, 또 金正日이가 나오면 이것은 참 땡 잡는 것이다 내기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창밖에 내다 보니까 환영 나온 여자 분들이 꽃을 들고 서 있었을 때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金永南이나 누가 안 나왔겠느냐, 그리고 儀典長으로 간 우리 孫相賀 의전장이 있습니다. 미리가 있었는데 그 분이 올라와서 대통령께서 물었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은 나왔느냐 그러니까 그 분이 “지금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와, 하는 소리가 갑자기 나서 창가를 내려다 보니까 金正日 위원장이 저 끝에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절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을 걸고 저는, 우리 일행이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梁 차관이 아까 답변드린 것은 누군가가 평양에서 왔다는 쪽지를 주어서 읽었지

본인이 예를 들면 金正日 위원장이 마중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柳興洙委員 전 세계가 지켜보는 TV 앞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統一部長官 朴在圭 아니, 쪽지를 받고…… 제가 아까 물어보았습니다.

○柳興洙委員 쪽지를 받았든 어쨌든지 본인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사전에 알았다’ 나도 TV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그 방송이 그대로 다 나간 거예요.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지요?

○統一部長官 朴在圭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모레 여기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한 치의 거짓도 없이 보고드리겠습니다.

○曹雄奎委員 梁 차관께 질의하려고 하는데 梁 차관께서 증언대에 서 주시겠어요?

아까 답변한 것을 제가 속기록을 읽겠습니다.

“그 당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그 질문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평양 상황실에다가 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 프레스센터에는 관계부처 차관단으로 구성된 보도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상황실에서 지침이 온 내용대로 차관은 발표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몇 사람이 앉아서 사석에서 나눈 이야기도 아니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보도지원협의회 책임자 되시는 梁 차관께서 지침을 받은 그대로 전 세계에 알렸던 사실을 이 상임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발표한 때가 金大中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몇 시간 후였습니까?

○統一部次官 梁榮植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오후 브리핑 같습니다마는 시간은 정확하게 확인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이미 그 때는 저희들이 어떤 상황 판단을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다만 단순하게 ‘사전에 알았었다’ 이렇게 표현한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하루 전에……

○曹雄奎委員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그러셨어요. “질문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평양 상황실에다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도착한 후에 조회했다는 이야기가 분명하지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그렇습니다.

○曹雄奎委員 그 다음에 지침을 받으신 것이지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그렇습니다. 그런 후에……

○曹雄奎委員 그러면 지침대로 발표하신 것이지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예.

○曹雄奎委員 그러면 이것이 그냥 인포멀하게 진행된 상황도 아니고 차관단으로 구성된 보도지원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이런 중요한 역사적인 업무를 취급하셨으면 그 지원단에 어떤 업무지침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평양 상황실에서 보내주는 이러한 중요한 보도를 아무나 가져와서 쪽지에 적어주면 발표하고 그러셨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업무진행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는지 보고해 주세요.

○統一部次官 梁榮植 그것은 조사를 하실 테니까 세밀하게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라 그런 것이 아니고 협의회 차관단은 장소가 일정한 데서 회의실에 모입니다. 그리고 또 국정홍보처장이 프레스센터는 관할을 하고 관계부처 차관들이 나와서 브리핑하기 전에 원고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은 오전에 국정홍보처장이 하고 오후에 제가 하고 또 단순한 내용이 있을 때는 상황실장이나 또 사회 보는 공보관이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曹雄奎委員 어쨌든 유감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남북문제를 전담한 통일부에서 이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진행되는 내용을 이렇게 체계적이 아닌 방법으로 즉흥적인 방법으로 처리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또한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이 사실 자체가 남북회담 자체의 신뢰도를 전 세계에 지금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음 회의 때 진실을 갖고 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하고 우리의 조사에도 추호의 의혹도 없도록 분명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참 유감스럽고 우리 대한민국의 신뢰성에 너무 엄청난 훼손을 갖다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습니다.

○統一部次官 梁榮植 진실되게 정직하게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明煥 이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명예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통외통위 첫 번째 회의가 중요한 문제 때문에 벽에 부딪혀서 몸돌 바를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장관께서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의

례적인 질의를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 22일 3차 회의에서 진상보고를 해주시고 오늘 다 못 하신 답변, 새로운 질의를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중에 朴槿惠 위원이 질의한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외교통상부의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모레 진상보고를 받고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산회)

새천년민주당

文 喜 相 金 成 鎬 金 雲 龍 朴 相 千
柳 在 乾 李 洛 淵 李 昌 馥 林 采 正
張 誠 珉

어느교섭단체에도속하지아니하는의원

金 宗 鎬 鄭 夢 準 韓 昇 洙

(6월17일자)

○出席委員

金 德 龍 金 成 鎬 金 榮 龜 金 容 甲
金 雲 龍 金 元 雄 金 鍾 河 金 宗 鎬
文 喜 相 朴 寬 用 朴 槿 惠 朴 明 煥
朴 相 千 徐 清 源 柳 在 乾 柳 興 洙
李 洛 淵 李 昌 馥 林 采 正 張 誠 珉
鄭 夢 準 曹 雄 奎 韓 昇 洙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수 석 전 문 위 원 金 光 東
입 법 심 의 관 金 容 九

○政府側參席者

통일부

장 관 朴 在 圭
차 관 梁 榮 植
기 획 관 리 실 장 李 浩
통 일 정 책 실 장 金 炯 基
정 보 분 석 국 장 申 彦 祥
교 류 협 력 국 장 黃 河 守
인 도 지 원 국 장 洪 良 浩
통 일 교 육 원 장 崔 炳 輔
남북회담사무국장 孫 仁 教
경수로기획단장 張 瑄 燮
공 보 관 李 寬 世
감 사 관 朴 贊 奉

【報告事項】

○統一外交通商委員會常任委員選任

한나라당

朴 明 煥 曹 雄 奎 金 德 龍 金 榮 龜
金 容 甲 金 元 雄 金 鍾 河 朴 寬 用
朴 槿 惠 徐 清 源 柳 興 洙